nabo

Economic Trends & Issue

경제동향 &이슈

2016 통권 제48호 | 10

Contents

Ⅰ. 경제동향

Ⅱ. 최근 내수경기의 특징과 시사점

Ⅲ. 주요국 통화정책과 글로벌유동성 현황 및 시사점

Ⅳ. 국민연금 크레딧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Ⅴ. 농업인의 소득안정 정책과 입법동향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6
통권 제48호
10

nabo

경제동향 & 이슈

Economic Trends & Issue

Ⅰ. 경제동향 2
Ⅱ. 최근 내수경기의 특징과 시사점 8
Ⅲ. 주요국 통화정책과 글로벌유동성 현황 및 시사점 17
Ⅳ. 국민연금 크레딧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7
Ⅴ. 농업인의 소득안정 정책과 입법동향 3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1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생산, 고용 등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이며 파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경기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는 상황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4Q	1Q	2Q	3Q	7월	8월	9월
전산업생산	1.4	1.7	2.4 (0.5)	2.3 (0.1)	3.6 (1.5)	–	3.4 (0.0)	5.0 (–0.1)	–
광공업생산	0.2	–0.6	–0.1 (–0.9)	–0.2 (–0.6)	1.0 (1.0)	–	1.6 (1.3)	2.3 (–2.4)	–
서비스업생산	2.3	2.8	3.3 (1.2)	2.8 (–0.2)	3.7 (1.6)	–	3.0 (–0.3)	4.7 (0.7)	–
소매판매액	2.0	3.9	6.1 (3.1)	4.6 (–1.0)	6.2 (2.8)	–	4.4 (–2.5)	6.0 (2.0)	–
설비투자지수	5.2	6.3	1.6 (–1.2)	–7.1 (–8.7)	0.8 (6.4)	–	–12.3 (–11.7)	3.6 (14.0)	–
건설기성액(불변)	–0.7	2.3	8.0 (0.0)	14.8 (9.4)	19.2 (2.3)	–	19.8 (0.2)	23.6 (3.2)	–
수출(통관)	2.3	–8.0	–12.0	–13.6	–6.7	–4.9	–10.4	2.6	–5.9
수입(통관)	1.9	–16.9	–17.8	–16.1	–10.3	–5.4	–13.6	0.7	–2.3
실업률	3.5	3.6	3.1	4.3	3.8	3.6	3.5	3.6	3.6
취업자 수(천명)	533	337	376	287	289	318	298	387	267
소비자물가	1.3	0.7	1.1	1.0	0.9	0.8	0.7	0.4	1.2
원/달러환율	1,053	1,131	1,158	1,202	1,163	1,121	1,144	1,112	1,107
국고채금리(3년)	2.59	1.79	1.70	1.53	1.42	1.26	1.22	1.24	1.31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감소를 보임.

- 8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비스업 생산이 부동산 및 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0.7%)를 보였으나, 광공업 생산이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2.3%)한 데 주로 기인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수출부진과 생산차질 등으로 7월(73.8%)보다 3.4%p나 하락한 70.4%를 기록
- 8월 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수입액 등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0.2p 상승한 101.1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3p 상승한 100.7을 기록

소매판매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용품 판매 증가 등으로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

- 8월중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6.6%, 2.2%, 7.0% 증가하는데 힘입어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8월중 내구재판매는 자동차 판매가 일부업체 파업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5.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무더위로 인한 냉방가전 판매 증가 등으로 6.6% 증가
  - 정부가 7월부터 실시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가전제품 판매 증가에 기여
- 그러나 9월 중 소매판매는 자동차업계 파업 장기화, 휴대폰 리콜 사태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류 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며 호조를 보였으나 관련 선행지표들이 부진하여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

- 8월 중 설비투자지수(전월대비)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일반기계류(23.4%)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난달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운송장비류 투자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전체적으로 14.0% 증가
  - 기계류(전월대비, %): ('16.6월) 2.8 → (7월) –0.3 → (8월) 15.3
  - 운송장비(전월대비, %): ('16.6월) 10.5 → (7월) –31.6 → (8월) 11.0
- 다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 기계류 내수출하, 제조업 평균가동률, 기계류수입액 등이 여전히 부진함에 따라 투자증가세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16.6월) 19.2 → (7월) –15.5 → (8월) –10.2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16.6월) 2.9 → (7월) –0.1 → (8월) 1.8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16.7월) –13.9 → (8월) 24.1 → (9월) –25.2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 모두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8월 중 건설기성액(불변)은 전월대비 3.2% 증가하여 전월(0.2%)보다 3.0%p 높아졌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23.6% 증가하는 호조를 나타냄.
- 건축은 수도권 아파트청약 호조에 힘입어 재건축, 재개발 내 주택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2017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택건설수주도 급증
  - 또한 사무실, 창고, 경기장, 관광 관련 시설 등 비주택부문의 수주도 양호하여 당분간 전체 건축투자의 활성화가 이어질 전망
  - 다만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정부가 주택금융규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연말 전후에는 둔화 예상
  - 주택투자(경상,전년동기대비, %): ('16.6월) 35.6 → (7월) 23.5 → (8월) 31.5
  - 주택건설수주(경상,전년동월대비, %): ('16.6월) 20.0 → (7월) 26.9 → (8월)25.3
  - 사무실건설수주(경상,전년동월대비, %): ('16.6월) 0.8 → (7월) 82.1 → (8월) 72.1

- 토목은 전월대비 0.1% 증가하여 전월(0.3%)에 이어 증가폭이 낮은 수준이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1.9% 증가
  - 이는 전년 하반기에 토목투자가 큰 폭 감소했던 기저효과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플랜트투자가 전체 토목투자를 견인하는 상황
  - 플랜트투자(경상, 전년동기대비, %): ('16.6월) 70.2 → (7월) 72.4 → (8월)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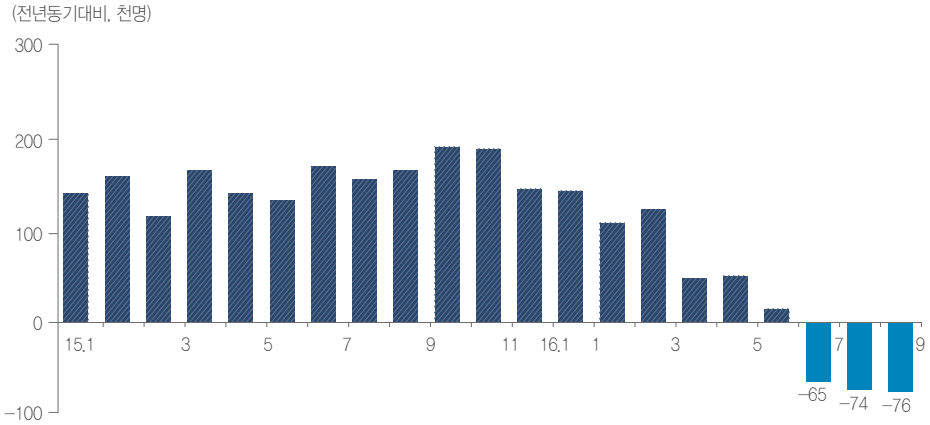
수출은 자동차업계 파업, 휴대폰 리콜 등의 특이요인과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8월 중 증가에서 다시 감소로 전환

- 9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한 408.6억달러를 나타내며 8월(2.6%) 증가에서 다시 감소로 전환
- 수출이 다시 감소로 전환한 데는 조업일수의 감소(0.5일) 외에 자동차 업계의 파업과 휴대폰신제품 리콜 등으로 자동차(–24.0%)와 무선통신기기(–27.9%)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작용
- 수입은 소비재가 증가했으나, 원자재 수입 감소가 지속되고 자본재 수입도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3%를 기록
  - 수입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6.5월) –8.6 → (6월) –7.6 → (7월) –13.6 → (8월) 0.7 → (9월) –2.3
- 무역수지는 71억달러 흑자를 보이며 5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감.

노동시장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의 부진으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증가세 둔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실업률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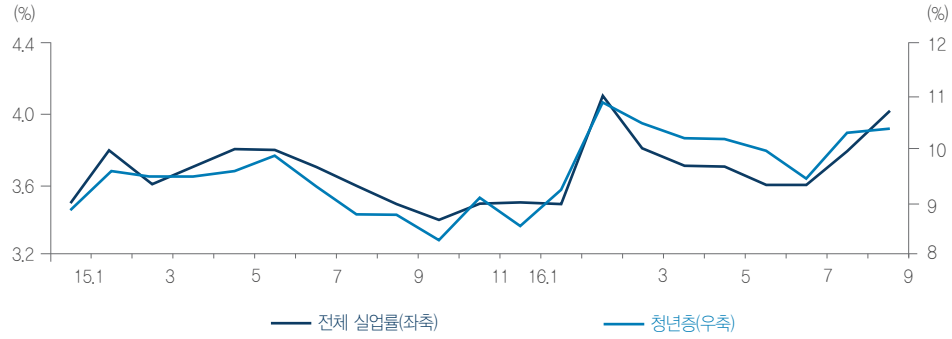
- 8월 중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7만명(1.0%) 증가하여 전년 동월(34.7만명, 1.3%)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축소
  -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만명): 제조업 –7.6, 농림어업 –6.5,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1.4), 운수업(–1.5)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10.2),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5.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7) 등에서 호조를 보여 36.3만 증가
  - 수출 부진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3개월 연속 지속(만명): ('16.7월) –6.5 → (8월) –7.4 → (9월) –7.6
- 전체 실업률도 3/4분기 들어 청년층과 대졸이상 학력자, 조선업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 전체 실업률(계절조정, %): ('16.7월) 3.6 → (8월) 3.8 → (9월) 4.0
  - 청년실업률(계절조정, %): ('16.7월) 9.4 → (8월) 10.3 → (9월) 10.4
  - 대졸이상 학력자 실업률(9월, %): ('14) 3.3 → ('15) 3.2 → ('16) 3.6
  -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률(9월, %): 부산 ('15) 2.6 → ('16) 4.0, 울산 ('15) 3.0 → ('16) 3.5, 경남 ('15) 2.3 → ('16) 3.4

[그림 1]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계절조정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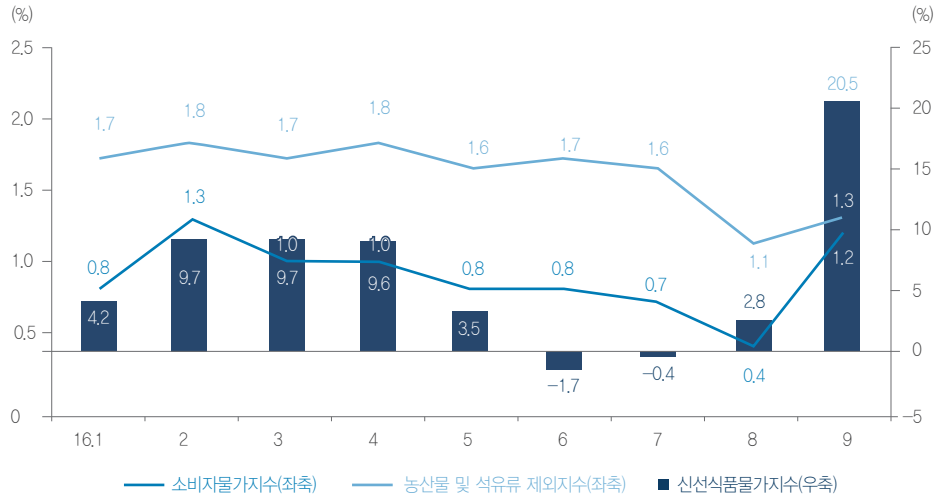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하락폭 축소와 폭염피해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전월보다 큰 폭으로 상승

-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은 전월보다 0.8%p 높아진 1.2%를 나타냄.(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는 1.3% 상승)
  - 상품가격 중 석유류가격(전년동월비)은 유가하락으로 7.0%의 하락률을 보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29%p 떨어뜨리고, 반면 농산물가격은 15.3% 상승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6%p 상승시킴.
  - 서비스가격은 집세(2.4%), 공공서비스(0.9%), 개인서비스(2.2%) 등이 모두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08%p 끌어올림.

[그림 3]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 9월 중 급등한 채소값은 가을작형 물량이 본격 출하되면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유가 하락폭은 축소되면서 10월 중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시장금리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소폭 상승

- 9월 중 국고채(3년) 월평균 금리는 1.31%를 기록하여 8월(1.24%) 보다 7bp 상승함.
- 회사채(장외3년, AA–) 월평균 금리는 1.70%를 나타내어 8월(1.65%) 보다 5bp 상승함.

원/달러 환율은 월 중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나타냄.

- 9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07원(기준환율)으로 8월(1,112원)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월 중에는 1,093~1,120원 구간에서 높은 변동성을 시현
  - 9월 초반에는 경상수지 흑자,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8.8일, AA— → AA)으로 외국인증권투자가 증가하면서 1,093원까지 하락
  - 그러나 9월 중반에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며 1,120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미 연준의 금리동결(9.21) 결정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
  - 경상수지 흑자(억 달러): ('16.6월) 121 → (7월) 87 → (8월) 55
  - 외국인증권투자 증감(조원): ('16.7월) 6.1 → (8월) 2.7 → (9월) 3.8

최근 우리경제는 파업으로 인한 수출차질, 구조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경기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

2016년 8월 국세수입 실적

(누적) 1~8월 세수실적은 전년 동기(151.6조원)에 비해 20.8조원(13.7%) 증가한 172.4조원으로, 증가추세는 2/4분기 이후 둔화

- 국세 증감(전년동기대비 순계, 1Q, 2Q, 7~8월): (조원) 13.8, 4.9, 1.8 (%) 27.5 , 8.6, 4.1
  - 누계, %: (1월) 17.1 (2월) 34.7 (3월) 27.5 (4월) 23.1 (5월) 20.3 (6월) 17.8 (7월) 14.9 (8월) 13.7
  - 당월, 조원: (1월) 4.4 (2월) 6.5 (3월) 2.9 (4월) 4.2 (5월) 0.7 (6월) 0.0 (7월) 1.1 (8월) 0.7

(당월) 8월 중 세수실적은 17.0조원으로, 소득세 세무일정에 따른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0.7조원 증가

- (소득세) 근소세 · 종소세가 각각 EITC[1] 조기지급 시작,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시기조정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4조원씩 감소
  - 근소: EITC · CTC[2] 지급을 전년보다 이른 8.29부터 시행하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종소: 2015년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5.12 국회통과)으로 종합소득세(연말정산분) 분납을 7월에서 8월까지 유예함에 따라, 2015년 8월 실적이 시기조정으로 높은 수준
- **(법인세)** 중간예납분을 '15년 법인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함에 따라 증가세
- **(부가가치세)** 수출감소에 따른 환급금 감소로, 국내분이 +1.0조원
  - 수출(전년동기대비,%): (15.1Q) −0.2, (15.2Q) −1.2, (15.3Q) 3.0, (15.4Q) −6.2, (16.1Q) −5.4, (16.2Q) −1.0
- 교통세는 소비량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 기타 세목은 전년 동월과 유사

1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2 자녀장려세제 (CTC: Child Tax Credit)

[표 2] 2016년 8월 국세수입 실적 (조원, %)

구분	8월 실적			1~8월 누계				진도율		추경/전망	
	'15.8	'16.8	증감액	'15.8	'16.8	증감액	증감률	'15.8	'16.8	정부	NABO
국세	16.3	17.0	0.7	151.6	172.4	20.8	13.7	69.6	74.1	232.7	237.0
소득세	6.2	5.3	−0.9	41.6	46.7	5.1	12.2	68.6	73.8	63.3	65.2
− 양도	1.4	1.3	0.0	7.6	9.0	1.5	19.2	63.6	81.6	11.1	11.8
− 근로	2.4	2.0	−0.4	18.8	21.1	2.3	12.3	69.3	72.2	29.2	30.2
− 종소	1.8	1.4	−0.4	8.6	9.6	1.0	11.2	67.5	70.6	13.6	13.7
법인세	8.6	9.5	0.9	32.6	39.7	7.1	21.8	72.5	77.3	51.4	52.6
부가가치세	−3.3	−2.3	1.0	38.0	44.9	6.9	18.1	70.2	75.2	59.8	58.8
− 국내분	−6.4	−5.4	1.0	13.6	22.4	8.8	65.0	79.7	77.1	−	−
− 수입분	3.1	3.0	−0.1	24.5	22.5	−2.0	−8.0	65.8	73.4	−	−
교통세	1.2	1.4	0.2	9.3	10.3	1.0	10.8	65.6	69.1	14.8	15.3
관세	0.8	0.7	−0.1	5.6	5.5	−0.1	−2.1	66.1	66.3	8.3	8.3
기타	2.8	2.4	−0.4	24.4	25.3	0.9	3.5	68.9	71.9	35.1	36.9

Ⅱ. 최근 내수경기의 특징과 시사점

2016년 들어 내수가 수출부진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현재 내수경기는 상승국면으로 판단

- 주택 및 비주택 건물투자의 급증으로 201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3.0%) 중 건물투자의 성장기여도가 1.4%p, 성장기 여율이 47%에 이르러 올해 경제성장이 주로 건물투자에 의존
-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건설 · 설비 · 지적재산생산물)를 포괄하는 정부지출도 증가하여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2015년 상반기 18.0%에서 2016년 상반기에는 18.4%로 0.4%p 상승
  - 상반기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1%p(기여율 33%) 내외로 추정
- 반면 2016년 들어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은 수출부진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주요 요인
  - 미연준 금리인상(2015년 12월) 이후 중국 금융시장 불안,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브렉시트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성을 노정

민간소비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계부채 부담(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소비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부채를 가진 가구의 경우 2013년 이후 원리금상환으로 인한 소비감소효과가 주택가격상승효과를 초과(2013년, 2014년)하거나 거의 상쇄(2015년)
- 이러한 점에서 2010년 77.3%에 이르던 평균소비성향이 2016년 2/4분기 70.9%로 하락한 데에는 가계부채 부담이 크게 작용

기업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이 내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민간지출의 자생적 회복 시까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 특히 민간 설비투자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축소시켜 민간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이 긴요
- 최근 내수경기에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매우 컸던만큼 민간지출의 회복 시까지 정부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요구
- 다만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활성화의 경제성장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을 수행할 필요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유승선 경제분석관(788-4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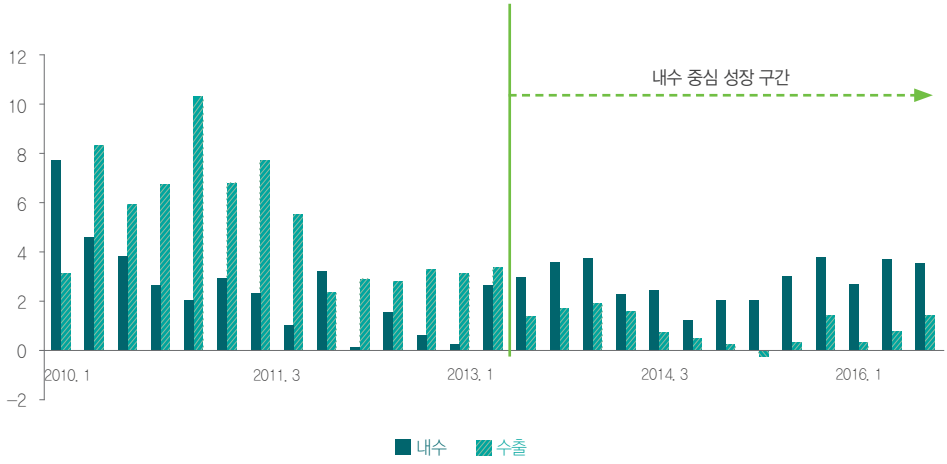
01 머리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수출부진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성장을 견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수요 약화로 저성장세를 지속
  - 세계경제의 저성장은 유럽재정위기, 국제유가 급락에 이은 신흥개도국의 불안정, 중국경제의 성장세 하락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수출환경도 악화
  - 수출(통관기준)은 2016년 1~9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8.5% 감소
- 내수[1] 증가가 수출 감소의 충격을 완화시키며 국내경제 성장동력 역할
  - 2013년 3/4분기 이후 13분기 동안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상회
- 내수경기를 이끌어온 요인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내수경기 국면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

1 본 보고서에서 내수는 국민계정기준 실질최종소비(민간소비+정부소비), 실질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건설투자+지적재산생산물투자)의 합으로 정의

[그림 1] 최근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주: 1) 전년동분기대비 성장기여도
2) 내수 성장기여도는 국민계정 최종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 기여도의 합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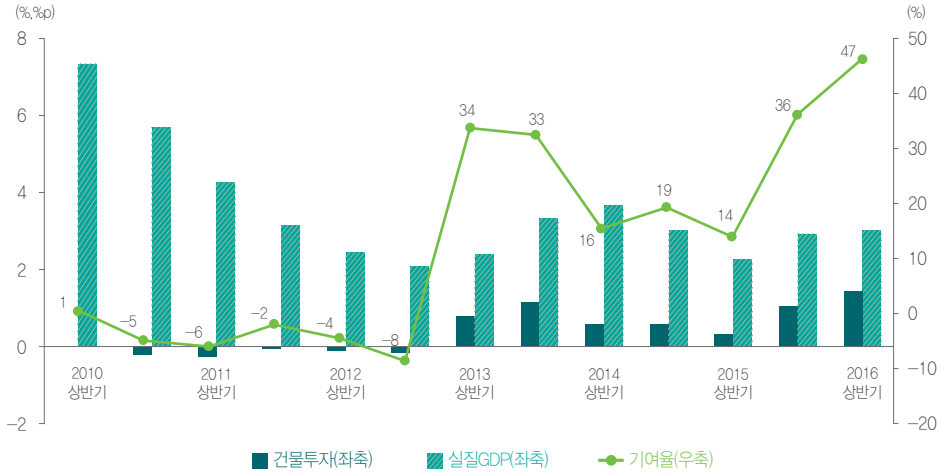
02 내수 부문별 동향

가. 건물투자(주택·비주택)가 견인한 경제성장

2016년 상반기 경제성장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투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

- 2016년 상반기 중 주택 및 비주택 건물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5.3%(국민계정기준) 증가
- 건물투자의 급증으로 201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3.0%) 중 건물투자의 성장기여도가 1.4%p, 성장기여율이 47%에 이르러 경제성장이 주로 건물투자에 의존

[그림 2] GDP성장률, 건물투자 기여도 및 기여율 추이



주: 1) 기여도(%p, 전년동기대비 기준)는 한국은행(2008)[2]에 따라 계산
2) 기여율(%,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건물투자성장기여도/GDP성장률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2 한국은행, "연쇄시계열의 성장기여도 계산방법," Quarterly National Accounts, 4th 2008, pp.99~101.

주택투자가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특수로 비주택투자도 뚜렷이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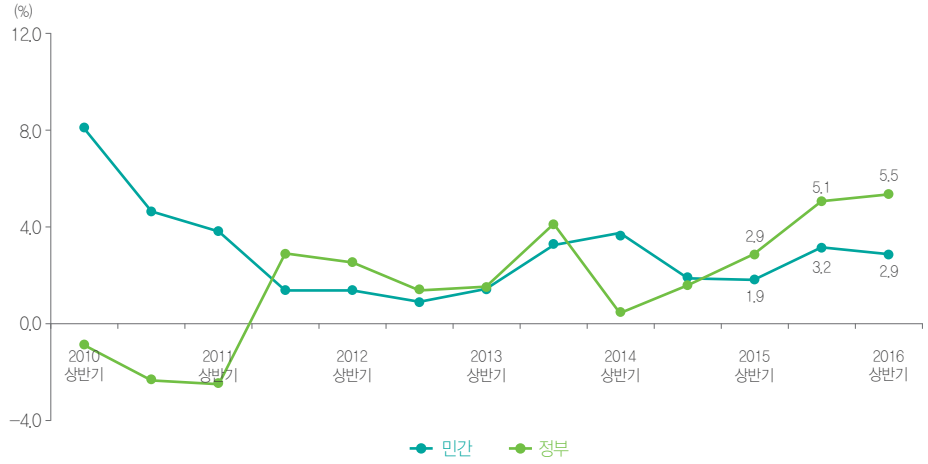
- 주택투자는 2016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23.4% 증가
  - 주택시장규제 대폭 개선(재개발 · 재건축 규제완화, 세제개편, 주택금융강화 등), 시장금리 하락, 전세가 급등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이 배경
- 비주택 건물투자도 평창동계올림픽 특수에 힘입어 경기장, 숙박, 관광시설 등이 건축되면서 2015년 하반기 3.9%에서 2016년 상반기 8.0%로 증가세 확대

나.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건설 · 설비 · 지적재산생산물)를 포괄한 정부부문의 역할 증대

행정부가 지출을 확대하여 민간지출의 부진을 일부 상쇄

- 민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2014년 하반기에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국제유가 하락 충격이 수출 감소로 이어지자 행정부는 경기방어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등 2015년부터 지출을 확대
  - 2016년 상반기에 정부지출이 전년동기대비 5.5%(국민계정기준) 증가하여 내수부문에 대한 민간지출증가율(2.9%)을 2.6%p나 상회
  -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2015년 상반기 18.0%에서 2016년 상반기에는 18.4%로 0.4%p 상승
  - 2016년 상반기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1%p(기여율 33%) 내외로 추정

[그림 3]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내수에 대한 지출증가율 추이



주: 내수는 국민계정 실질 소비와 실질총고정자본형성의 합
자료: 한국은행

다. 민간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주택가격 상승에도 부진

민간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진 평가

- 민간소비가 2016년 상반기, 3/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2.7%, 2.6% 증가하였으나 전년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위축(1.6% 증가)된 데 따른 기저효과와 2016년 상반기 중 개별소비세 인하(5%→3.5%)에 따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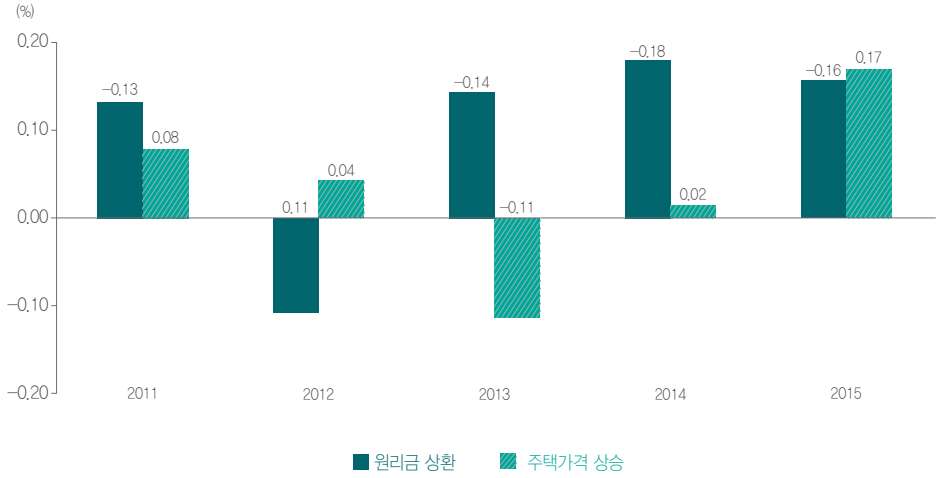
주택가격의 상승이 민간소비에 주는 영향 감소

- 최근 주택가격 상승[3]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계부채 부담(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소비확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
  -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의 소비진작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음.[4]
- 부채를 가진 가구의 경우 2013년 이후 원리금상환으로 인한 소비감소효과가 주택가격 상승효과(부의 효과, 차입제약완화효과)를 초과(2013년, 2014년)하거나 거의 상쇄(2015년)하였던 것으로 짐작
  - 최성호 · 송상윤 · 김영식(2015)의 연구를 이용하여 원리금 상환과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대략적으로 추정한 결과

3 전국주택가격(KB국민은행)이 2015년, 2016년 1~8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3.4%, 3.1% 상승

4 최성호 · 송상윤 · 김영식("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미시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분석」, 제21권 제2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5.6.15)은 주택가격 1% 상승 시 소비는 0.0649%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특히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TI)이 50%가 넘는 가계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미미하거나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분석. 나승호 · 정천수 · 임준혁("구조적 소비 제약요인 및 정책과제," 「BOK 경제리뷰」, 2013.3.)도 주택가격 상승의 소비증대효과가 있으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자상환부담이 커지면서 2006년부터 이자상환부담이 유동성 효과를 압도하기 시작할 정도로 부채부담이 커졌다고 분석

[그림 4] 연도별 원리금 상환과 주택가격 상승의 소비효과 비교



주: 1) 최성호 · 송상윤 · 김영식(2015)에서 소비에 미치는 주택가격의 영향(추정계수 0.0649)과 원리금상환의 영향(추정계수 −0.0114)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연간 원리금상환증가율(통계청)과 주택가격상승률(KB국민은행)을 대입하여 계산. 따라서 대입자료가 계수추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와 다르므로 계산된 소비효과는 엄밀한 결과가 아님을 유의. 다만 최근 소비동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
2) 원리금상환의 수치에 좌측 눈금과 다르게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원리금상환이 증가 시 소비에 부(−)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주택가격상승효과와 비교하려는 의도
3)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가격은 소비자물가로 실질화하여 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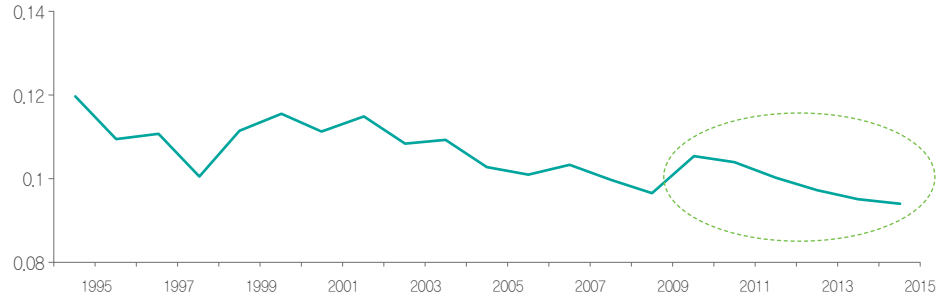
- 이러한 가계부채 부담의 영향을 고려할 때 2010년 77.3%에 이르던 평균소비성향이 2016년 2/4분기 70.9%로 하락한 데는 가계부채 부담이 크게 작용

라.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간 설비투자 위축

2016년 들어 민간 설비투자 지출 감소

- 설비투자는 2016년 상반기, 3/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각각 3.6%, 4.5% 감소
  - 특히 민간부문의 감소(상반기 중 −5.1%)가 더욱 심화
-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고정자본스톡이 증가하면서 자본스톡의 한계생산 감소에 따라 설비투자 유인이 약화
  - 설비투자의 한계생산이 2010~2015년 사이 10.8% 감소

[그림 5] 고정자본스톡의 한계생산 추이



주: 고정자본스톡(K)의 한계생산(MP_K)은 자본소득분배율(α), 총생산(Y)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MP_K (= \partial Y / \partial K) = \alpha Y/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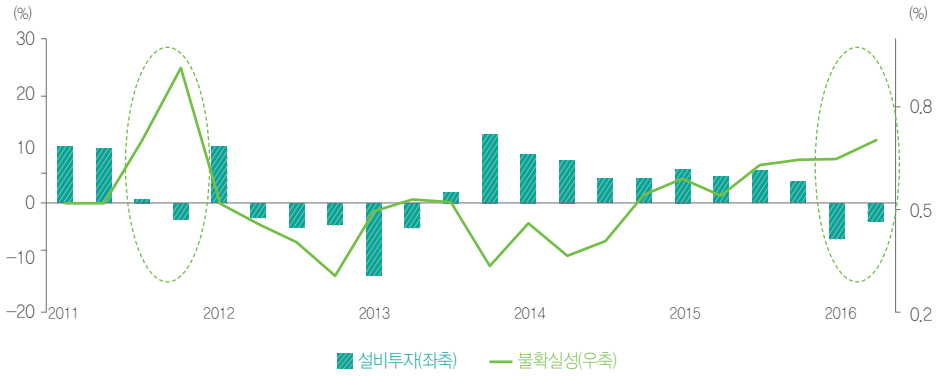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단기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크게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

- 2016년 들어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은 수출 및 민간소비 부진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 불안도 주요 요인
  - 미연준이 2015년 12월 금리인상 단행 전후부터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였고,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도입(1.29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6.23일) 등 전격적이고 예상키 어려웠던 이슈들이 부각
- 2015년 하반기부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기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상승하면서 설비투자를 압박
  - 환율을 GARCH모형에 투입하여 불확실성을 추정한 결과, 2016년 상반기 중 불확실성이 201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5]
  - 따라서 대외 불확실성이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5 2011년 하반기에 유럽재정위기가 재현되고, S&P가 2011년 8월 5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 → AA, 무디스는 8월 24일 일본의 신용등급을 Aa2 → Aa3로 하향 조정하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을 노정

[그림 6] 대외 불확실성과 민간 설비투자 추이



주: 대외 불확실성은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환율의 일일변동성을 추정하고 이를 분기로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기인한 대외 불확실성의 추정

- 본 보고서에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환율의 일일변동성(조건부 표준편차)을 추정하였으며, 추정모형은 아래와 같음
  - 이때 koe는 원/달러 환율, ** 5%내에서, ***는 1%내에서 유의함으로 의미

$$dlog(koe_t) = 0.000112^{**} + e_t \qquad E(e_t|\Omega_{t-1}) \sim N(0,\sigma^2)$$

$$\sigma^2 = 0.089e_{t-1}^{2***} + 0.912\sigma_{t-1}^{2***} + \eta_t$$

- GARCH(1,1)은 경제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져 예측이 어려워지고, 또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지속성을 가질 때 이를 모형화하는 데 유용

03 내수경기의 종합 판단

소비, 투자를 종합한 월별지표를 작성하여 그 추이를 관찰한다면 용이하고 신속하게 내수상황의 파악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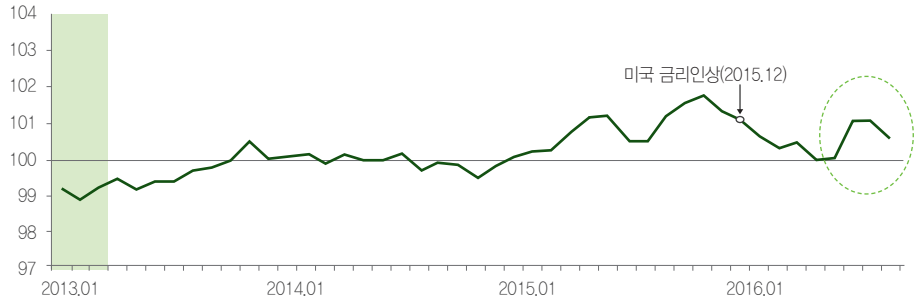
- 부문별로 경제적 비중이 다르고 추세와 변동폭도 다르기 때문에 부문별 동향분석으로 전체 내수상황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는 것은 곤란
- 전분기대비로 보면 건설투자는 2016년 중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소비, 설비투자는 등락을 시현

부문별 내수경기지표를 종합한 내수순환변동지수[6]는 최근 내수경기가 다소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상승국면으로 판단

- 2015년 11월~2016년 3월까지 내수순환변동지수가 하락
  - 2015년 12월 미국 금리인상 전후로 국제적인 금융불안이 확산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
- 반면 2016년 6월부터 내수순환변동지수가 상승하여 여전히 내수경기는 추세적 수준을 넘는 상승국면
  - 내수경기 추세선을 의미하는 100을 넘은 상태이고, 6~7월 중 비교적 탄력적으로 상승
- 다만 8월에는 동지수가 하락하였는데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10.2%)와 파업에 따른 자동차 내수출하(전월대비 -9.2%)의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

6 내수순환변동지수에 관해서는 박스 참조

[그림 7] 내수순환변동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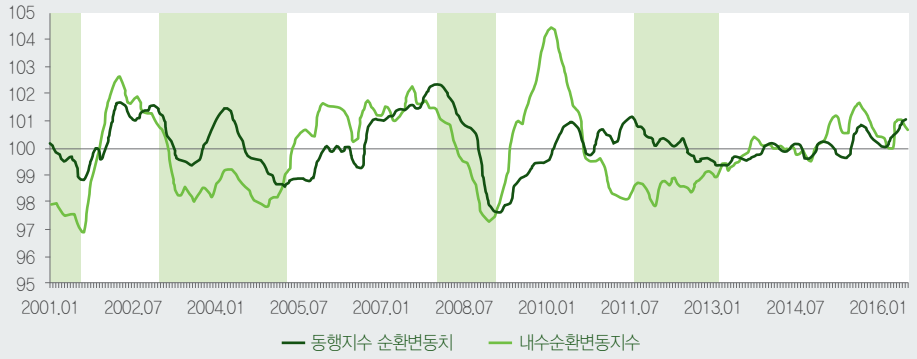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내수순환변동지수의 작성

- 내수순환변동지수 작성을 위해 내수 정보를 포함하는 15개 월별 지표를 사용[7)]
  - 각 변수들은 실질화,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준화(평균 0, 표준편차 1)의 과정을 거친 후 주성분분석을 적용
  - 내수순환변동지수는 설명력이 10%를 넘는 2개 주성분을 설명력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
    ※ 주성분분석을 통해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을 움직이는 주요 흐름(주성분)을 추출하여 내수순환변동지수를 작성
- 작성된 내수순환변동지수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비교한 결과 양 지수가 대체로 2001~2008년 중에는 대체로 동행성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괴리된 추이를 보이는 경우도 발생
  - 예를 들면 2009년 2월~2011년 8월의 경기확장기간의 중간에 내수순환변동지수가 하락하였음에도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전체 경기가 확장세
- 이와 같이 내수경기는 전체 경기와 동행하기도, 때로는 괴리를 나타내기도 하여 내수순환변동지수를 이용하면 경기 동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가능

내수순환변동지수와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도매 및 소매업판매액지수, 서비스업(도소매 제외), 설비용기계류내수출하(선박 제외), 국내기계수주(제조업), 국내기계수주(비제조업), 설비투자추계지수, 건축수주, 건축기성, 내수용수입, 선행지수, 비농림취업자수, 제조업내수출하, 통화(M2), 회사채수익률, 소비자동향조사. 경기선행성 지표를 포함한 것은 경기동행 정보를 내재하고 있고, 내수의 추세적 흐름 파악에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

04 시사점

주택투자는 설비투자 등에 비해 성장잠재력 확충효과가 적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정책은 단기에 종료할 필요

- 최근에는 주택시장의 호조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요인이 되고 있으며,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
  -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주는 영향이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해 거의 상쇄
- 이처럼 주택시장 활성화가 경제에 주는 종합적인 영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을 수행

경쟁력 있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축소시켜줄 방안 마련

- 민간 설비투자가 취약하여 민간투자심리의 회복이 긴요한 상황
  - 특히 제조업 기계수주가 1~8월 중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하여 비제조업(-0.8%)에 비해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
  - 이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직면하여 제조업 업황이 악화되었기 때문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고, 특히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조치 필요

최근 기업구조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내수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내수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될 필요

- 내수경기가 아직 상승국면에 있으나 8월에 위축되며 다소 불안정한 모습
- 최근 내수경기에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민간지출의 자생적 회복 시까지 정부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요구
- 그러나 장기간 재정지출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규제완화,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개선 등 내수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

Ⅲ. 주요국 통화정책과 글로벌유동성 현황 및 시사점

1.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유동성 공급 현황

확장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로 인하여 글로벌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

- 미국, 일본, 유로의 본원통화 공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한국, 대만, 호주 등지의 통화팽창도 크게 증가
  - 다만, 유로지역과 중국을 중심으로 통화팽창 속도는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음.
- 선진국 국내신용과 역외신용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팽창속도가 둔화되는 추세
- 선진국 민간 금융기관의 부채규모는 부분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도 있으나, 한국, 호주, 캐나다 등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증가율로 확대

2.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제여건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정책금리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한국, 홍콩, 태국 등의 정책금리 수준 또한 2% 이하를 기록하여,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 스웨덴, 스위스, 유로존 등 유럽과 일본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함으로써 초저금리 장기화 주도
-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해당 지역에 확산되어 과도한 금융완화의 부작용 우려
- 한국, 홍콩, 태국 등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에 동반하여 조정 예상

저금리 기조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세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양적완화의 부작용 우려

- 가계소비와 투자 등의 민간부문의 경제회복세가 부분적으로 소폭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미약
-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국면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한국, 중국, 신흥아시아 국가들에도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3.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저금리 정책의 장기화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가계부채에 부작용 확대

-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증가속도를 추월하는 가계부채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저금리 정책에 난관
- 미 · 금리 인상에 대응하여 신흥시장의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의 여지가 위축되어, 가계 및 국가부채, 그리고 실물경제를 고려한 통화 · 재정정책 조합 필요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김혜선 경제분석관(788-4652)

01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유동성 공급 현황

가. 주요국 통화량 공급 현황

금융위기 이후에도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회복세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 글로벌유동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본원통화의 누적증가 금액은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중국도 확대되었으나, 유로는 동일 수준 유지, 한국은 큰 폭으로 확대
  - 한국은 2009~15년 중 67조원의 추가적인 본원통화가 공급되어 2015년 총 131조원 규모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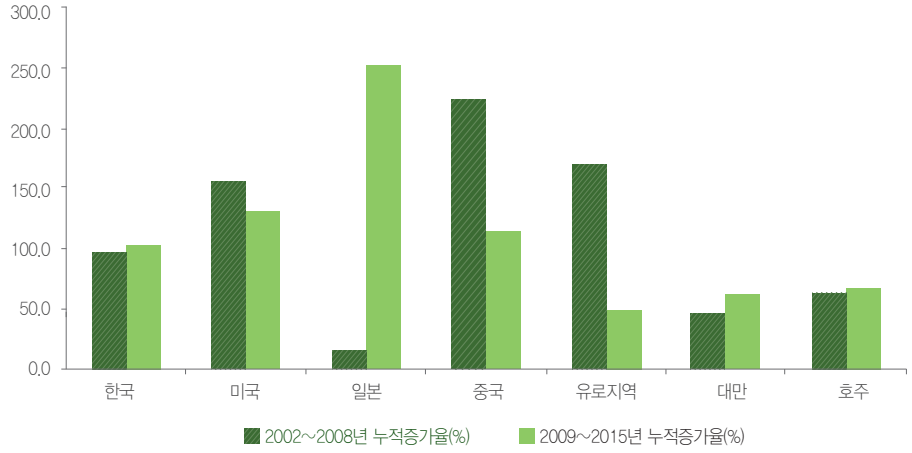
[표 1] 주요국 본원통화 공급 현황

	단위	2002	2006	2008	2010	2012	2015	누적증가금액	
								2002 ~ 2008	2009 ~ 2015
미국	십억달러	699	827	1,666	2,017	2,676	3,836	1,016	2,169
중국	십억위안	4,514	7,776	12,922	18,531	25,235	27,638	8,937	14,716
일본	십억엔	99,401	94,778	101,261	109,507	138,475	356,134	12,348	254,873
유로	십억유로	481	772	1,151	1,073	1,631	1,723	725	573
한국	십억원	37,987	51,870	64,846	74,546	88,342	131,439	32,020	66,593

주: 1)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현금) +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예치금
2) 누적증가금액은 (2008년 말잔 금액 – 2001년 말잔 금액), (2015년 말잔 금액 – 2008년 말잔 금액)으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본원통화 팽창속도를 비교할 때, 유로지역과 중국은 본원통화 팽창속도가 완화된 반면,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본원통화 팽창속도가 급속히 확대
- 한국, 대만, 호주 등지의 본원통화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교하여 증가율이 소폭 확대

[그림 1] 본원통화 증가 현황 (금융위기 전후 비교, 누적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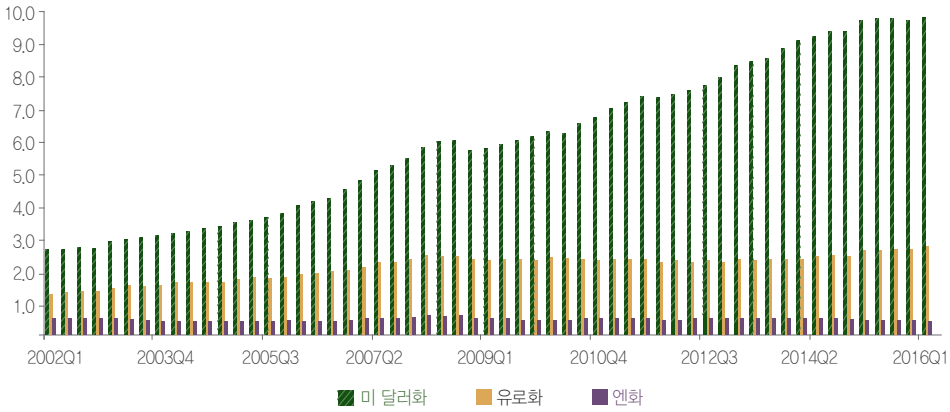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나. 주요국 역외신용 현황

선진국 역외신용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금융위기 이후에는 팽창속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미국, 유로, 일본의 역외신용의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유로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며 조정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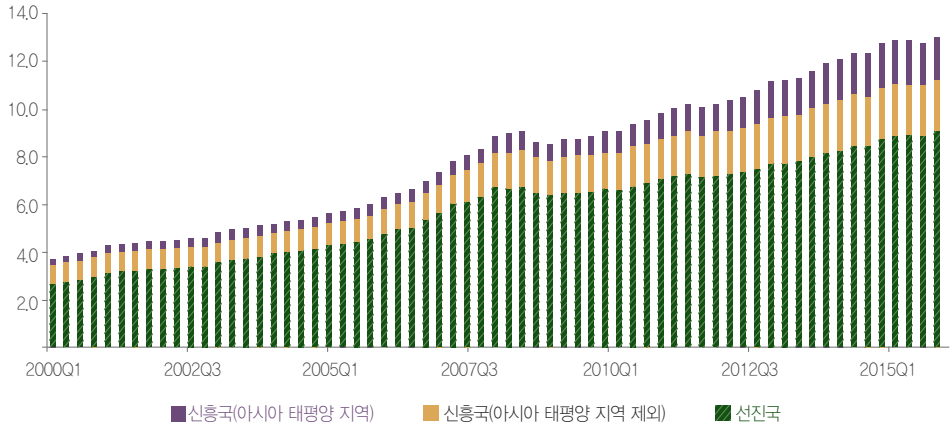
[그림 2] 주요국 역외신용 현황 (십억달러)



주: 1) 비 은행부문 역외 신용2) 유로화와 엔화 신용잔액은 미국 달러화로 평가 (2015년 12월 기말 기준 환율)
자료: BIS, Global liquidity; total credit by currency of denomination, Table E2.

- G3(미국, 유로, 일본)의 신흥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역외 신용은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팽창

[그림 3] G3(미국, 유로, 일본) 역외신용 지역별 비교 (십억달러)



주: 신흥국(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자료: BIS, Global liquidity; total credit by currency of denomination, Table E2.

다. 주요국 금융기관 부채 규모

주요국 금융기관의 부채 규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유럽과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 부채가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한국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선진국 민간 금융기관의 부채는 부분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나, 한국, 호주,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에서 높은 증가율로 증가 추세 유지

[표 2] 주요국 금융기관 부채 최근 변화 (각국 통화, 십억, 증가율 %)

국가	통화	2012		2013		2014	
미국	달러	54,973	(2.9)	58,076	(5.6)	60,344	(3.9)
유로11국	유로	42,431	(1.5)	40,137	(–5.4)	40,836	(1.7)
일본	엔	2,685,988	(3.4)	2,784,748	(3.7)	2,975,672	(6.9)
덴마크	덴마크크론	11,024	(3.0)	10,968	(–0.5)	11,527	(5.1)
노르웨이	노르웨이크론	7,284	(3.6)	7,605	(4.4)	8,224	(8.2)
스웨덴	크로나	13,573	(2.5)	14,448	(6.4)	15,940	(10.3)
한국	원	4,542,506	(7.2)	4,773,087	(5.1)	5,181,997	(8.6)
호주	호주달러	3,757	(7.7)	4,152	(10.5)	4,466	(7.6)
캐나다	캐나다달러	6,288	(5.6)	6,554	(4.2)	6,972	(6.4)
영국	파운드	14,179	(2.0)	13,840	(–2.4)	14,087	(1.8)

주: OECD B1_GE, GDP(national currency, current price)를 적용하여 Financial corporation Debt를 역산
자료: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Table 720, Financial Balance Sheets, Financial Corporations (S12), Debt/GDP 10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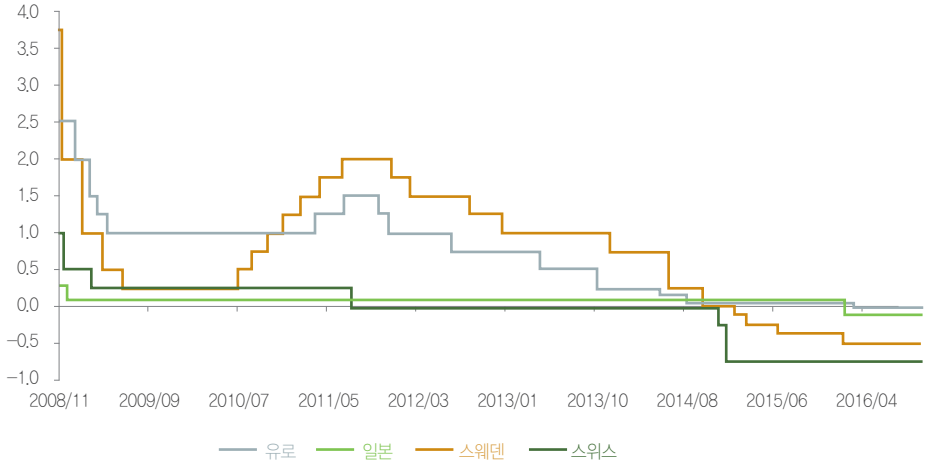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통화 정책 및 경제여건

가. 통화정책 국제 비교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최근 마이너스 정책금리[1] 단계에 진입

- 스웨덴, 스위스, 유로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함으로써 저금리 장기화를 주도
  - 스웨덴, 스위스는 각각 2014년 10월, 2011년 8월 제로금리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을 진행하여 현재 −0.50%, −0.75% 수준 기록
  -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정책을 지속하다 2016년 2월 −0.10%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시행

[그림 4] 유럽과 일본의 정책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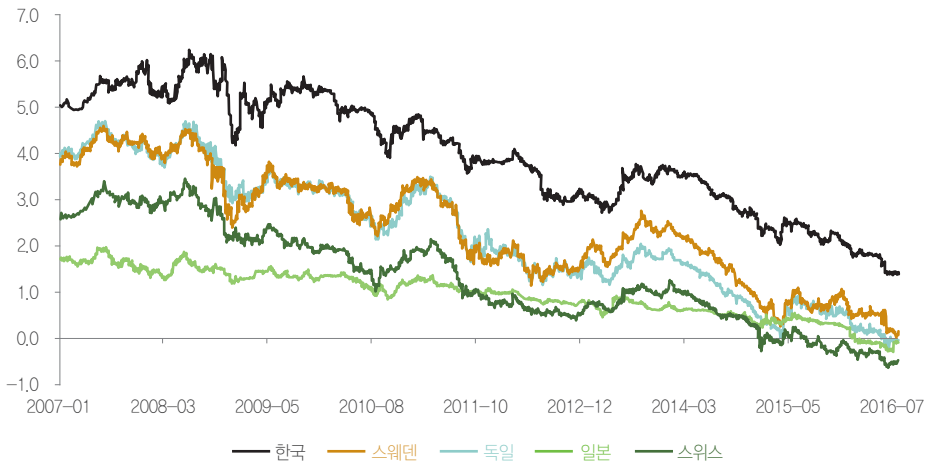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초저금리 수준의 정책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에 근접하며,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민간 금융거래에 확산되는 양상

- 2016년 10월 기준 10년만기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국가들인 독일(−0.01%), 일본(−0.06%), 스위스(−0.48%), 스웨덴(0.28%) 수준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시중금리로 확산되는 양상
  - 한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시행 국가는 아니지만 저금리정책의 영향으로 1.4%대를 기록

1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논의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견해들과 민간시장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ECB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강제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것이라면, 일본의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상당기간 이미 실제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해 왔던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K. Rogoff교수는 파이낸셜타임즈의 사설, 'It would be wrong to abandon the policy of negative rates'와 「화폐의 종말: 지폐 없는 사회」라는 최신 저서를 통하여,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다시 인상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저금리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부작용과 함께 설명하였다. 도쿠가츠 레이코는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라는 책자를 통하여 유럽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시중금융시스템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전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는 2013년 11월 국제통화기금 연차조사회의 강연에서 '자연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반면에, 한국경제신문 다산칼럼에서 안재욱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라는 글을 통하여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비판하고 소비확대 아닌 저축만 늘릴 뿐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림 5] 10년 만기 국채금리 비교 (%)



자료: Bloomberg

마이너스 금리정책[2]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과도한 금융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증폭

- 미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 마이너스 금리정책 시행 선진국들과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는 신흥시장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

[표 3] 마이너스 금리정책 시행국 중앙은행별 금리 적용대상

	유로존	일본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헝가리
적용대상	초과지준 및 대기성 수신	정책금리 대상잔액 (초과지준)	공개시장조작 참고 면제한도 초과예치금	CD잔액 대기성수신	CD잔액	대기성수신
적용금리	−0.40%	−0.10%	−1.25~0.25% −0.75%	−0.50% −1.25%	−0.65%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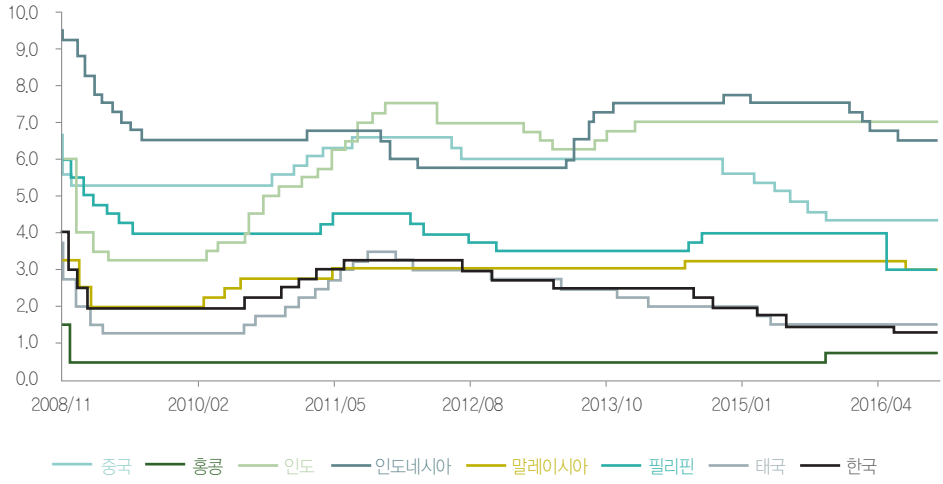
주: 1) ECB에서의 중앙은행 초과준비의 명칭은 '예금 퍼실리티'이며, 민간은행이 예금의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준비예금을 예치하는 것을 의미, 즉 초과지준부리 (초과지준에 붙는 금리)가 정책금리 중 양적완화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
2) 일본에서도 2016년 1월 29일 초과지준부리를 0.1% → −0.1%로 하향하여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개시한 바 있음.
자료: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한국, 홍콩, 태국 등의 정책금리 수준은 2% 이하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

-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신흥시장의 정책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

2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는 2014년 6월 5일 ECB(유럽중앙은행)가 일부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한다는 결정이다. 다만, 유럽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설정된 일은 과거에도 이미 있었던 사례로서 스위스 중앙은행인 SNB는 1972년 7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으로서 스위스프랑의 통화가치를 낮춰 무역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2009년 8월에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뱅크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2012년 8월 덴마크 국립은행도 유로에 대한 자국 통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이들의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일시적일 것으로 시장은 반응했으나, 2014년 6월 ECB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보다 장기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상황이다. ECB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목적이 '디플레이션 대책'이므로 디플레이션이 해소되기 전에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해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쿠가츠 레이코(2015),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에서 요약

[그림 6] 아시아 신흥시장 정책금리 추이 (%)



자료: 국제금융센터

나. 통화정책과 거시경제변수의 최근 현황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국면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중국, 신흥아시아 국가들에도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어 왔으며, 미국 등은 실물지표와 실업률 등이 소폭 호전되어 정책금리 인상으로 경제정책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 유로와 일본 등지의 양적완화 정책의 장기화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 예고에 따라 한국과 신흥아시아 국가들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표 4] 주요국 거시경제 변수의 최근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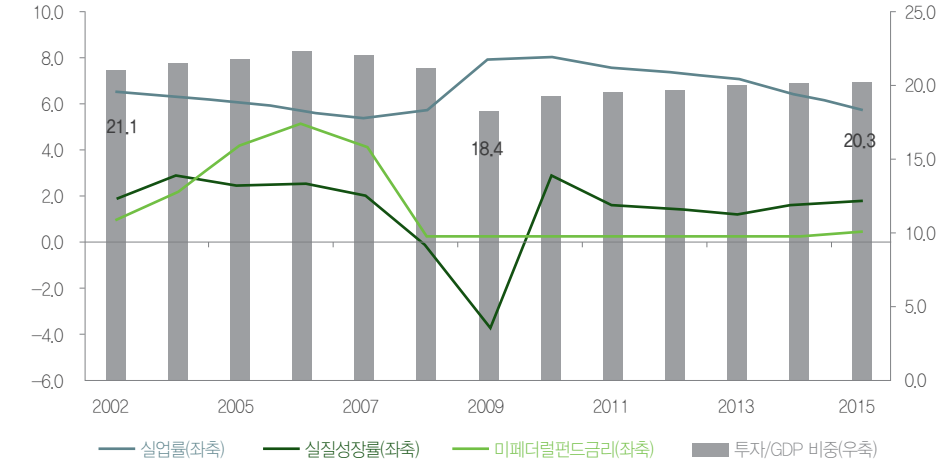
경제변수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성장률	미국	−2.8	2.5	1.6	2.2	1.7	2.4	2.6
	유로	−4.5	2.1	1.5	−0.9	−0.3	1.1	2.0
	중국	9.2	10.6	9.5	7.9	7.8	7.3	6.9
	일본	−5.5	4.7	−0.5	1.7	1.4	0.0	0.5
	한국	0.7	6.5	3.7	2.3	2.9	3.3	2.6
	아세안 5	2.4	6.9	4.7	6.2	5.1	4.6	4.8
총저축/GDP 비중	미국	14.3	15.1	15.7	17.7	18.3	19.2	19.1
	유로	20.8	21.5	22.4	22.3	22.4	22.8	23.6
	중국	51.1	51.8	49.8	49.7	48.8	49.3	47.9
	일본	22.6	23.8	22.4	21.9	22.2	22.6	25.3
	한국	32.2	32.7	34.5	35.2	35.3	35.3	36.2
	아세안 5	30.5	31.2	31.1	29.9	28.8	29.5	30.0
투자/GDP 비중	미국	17.5	18.4	18.5	19.4	19.8	20.0	20.3
	유로	20.4	21.0	21.5	20.1	19.6	19.8	19.8
	중국	46.3	47.9	48.0	47.2	47.3	46.7	45.0
	일본	19.7	19.8	20.2	20.9	21.2	21.8	22.0
	한국	28.5	32.0	33.0	31.0	29.1	29.3	28.5
	아세안 5	25.7	28.6	28.6	29.6	29.0	28.4	28.5
실업률	미국	9.3	9.6	8.9	8.1	7.4	6.2	5.3
	유로	9.7	10.2	10.2	11.4	12.0	11.6	10.9
	중국	4.3	4.1	4.1	4.1	4.1	4.1	4.1
	일본	5.1	5.1	4.6	4.3	4.0	3.6	3.4
	한국	3.7	3.7	3.4	3.2	3.1	3.5	3.6
정부부채[1)]/ GDP 비중	미국	86.0	94.7	99.0	102.5	104.6	104.6	105.2
	유로	78.3	84.1	86.7	91.3	93.3	94.3	92.5
	중국	32.6	33.1	33.1	34.0	36.9	39.8	42.9
	일본	210.2	215.8	231.6	238.0	244.5	249.1	248.0
	한국	31.4	30.8	31.5	32.1	33.8	35.9	37.9
	아세안 5	37.3	35.7	34.5	35.6	37.2	37.6	38.7
정부지출/ GDP비중	미국	41.6	40.0	39.0	37.3	36.0	35.5	35.0
	유로	50.7	50.5	49.1	49.7	49.6	49.3	48.5
	중국	25.5	24.0	27.0	28.4	28.5	28.9	31.3
	일본	40.0	38.9	40.6	39.8	40.6	39.8	39.3
	한국	21.3	19.5	19.9	20.6	20.9	20.8	21.0
	아세안 5	21.7	20.6	20.6	21.9	21.9	21.3	20.9

주: 1) 정부부채는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함.
자료: IMF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G7 국가들의 전체 실질성장률이 완만한 속도로 소폭 증가하고 투자비중도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정책금리는 2008~2014년 연평균 0.25% 수준을 지속한 후 2015년 0.50%로 인상
- 2009년 금융위기 시 18.4%까지 하락했던 총투자 비중이 완만한 속도로 2015년 20.3% 수준으로 개선

[그림 7] G7 거시경제 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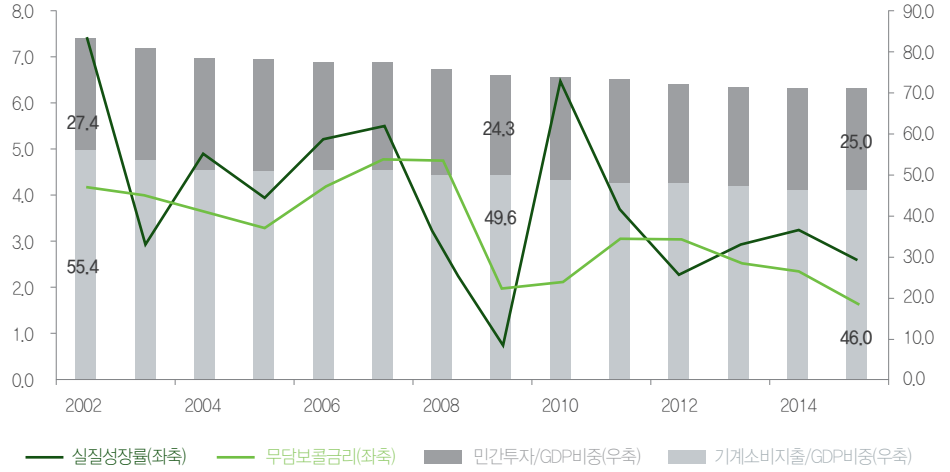


자료: IMF

한국의 저금리 기조 통화정책이 2011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GDP대비 민간투자 비중이 개선되지 못하고 가계소비지출의 비중은 하락세를 유지하여 실질성장률 회복 지연

- 무담보콜금리는 2015년 연평균 1.65%까지 하락하였으나 투자비중은 25.0%, 소비비중은 46.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실질성장률은 2014년 소폭의 반등 이후 다시 하락

[그림 8] 한국 거시경제 변수 변화



자료: 한국은행

03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민간투자와 가계소비 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시중유동성만 확대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유의할 필요

- 주요 선진국들이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소비와 투자 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저축률[3]이 크게 증가하여 총저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 유로와 일본은, GDP대비 국가총저축의 비중은 각각 2009년 20.8%, 22.6%에서 2015년 23.6%, 25.3%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우리나라도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가계소비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기업저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 GDP대비 국가총저축의 비중은 2009년 32.2%에서 2015년 36.2%로 증가
  - 예금은행 총수신 중 원화예금은 말잔 기준으로 2014년(1,081조), 2015년(1,164조)에 각각 7.0%, 7.7%의 증가율로 증가

3 IMF, The Corporate Saving Glut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15.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속도를 추월하는 가계부채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이 큰 어려움에 직면

-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주요국 중 스위스와 스웨덴, 일본의 가계부채/GDI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영국과 독일은 동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저금리 장기화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 추이를 지속

[표 5] 가계부채/GDI 비중의 최근 변화 (%)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덴마크	308.5	312.0	300.2	295.8	289.9	288.8
스위스	169.4	173.2	178.6	183.1	185.4	186.5
스웨덴	153.9	157.8	164.7	162.8	161.7	164.3
일본	122.9	123.2	123.1	119.9	118.9	121.2
한국	134.7	138.8	143.5	148.5	149.9	150.8
영국	158.3	151.6	146.8	147.4	143.0	140.6
미국	127.2	125.9	120.0	112.6	107.6	108.6
독일	91.9	92.5	90.6	88.9	87.6	86.7

자료: OECD

향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 그리고 실물경제를 염두에 둔 통화 · 재정정책의 조합이 필수적

-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여건과 국내 경제여건을 조화시켜야 하는 부담이 가중
  -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각국의 대내적인 여건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정책변화 시기와 속도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미 · 금리 인상에 대응하여 신흥시장의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의 여지가 위축되어, 가계 및 국가부채, 그리고 실물경제를 고려한 통화 · 재정정책 조합 필요

Ⅳ. 국민연금 크레딧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7년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총 546억 1,600만원

- 크레딧 제도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을 사회보험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
- 2016년 10월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출산 · 군복무 · 실업 등 세 가지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

출산크레딧의 낮은 국고부담률로 인한 연금 가입자 부담 증가

- 출산크레딧은 다른 크레딧과 다르게 국고지원비율 30%보다 훨씬 높은 70%를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예산을 편성
- 높은 기금부담률은 향후 연금가입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책임준비금 적립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2050년 출산크레딧 급여의 수급자는 200만명을 넘고, 기금의 부담액은 1조 1,6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사후 국고지원방식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 발생

- 현재 출산 · 군복무크레딧은 대상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사후 국고지원방식으로 예산을 편성
- 20~30대가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급여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크레딧 제도의 혜택은 현 세대가 누리고 비용은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세대간 형평성 문제 초래

국고부담률 상향 조정 및 사전적립방식으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 필요

- 출산크레딧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그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고부담률 상향 조정 필요
-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크레딧 요건에 해당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 필요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모주영 사업평가관(788-4835)

0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요

크레딧 제도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을 사회보험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부 등 구성원의 기여를 통하여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사회보장혜택을 누리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크레딧 제도는 한 국가의 사회보험이 실제 운영에 있어 단순히 이론적인 사회보험 원칙에만 입각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훈 또는 사회부조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016년 10월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출산, 군복무, 실업 등 세 가지 크레딧 제도를 운영

-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 군복무크레딧은 「국민연금법」 제18조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향후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전체 연금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산입하는 제도
-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75%를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최대 1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표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요

구분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크레딧
도입시기	2007.7 개정 (2008.1.1. 시행)		2015.1 개정 (2016.8.1. 시행)
근거규정	「국민연금법」 제18조	「국민연금법」 제19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국고지원 시기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시기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시기	보험료 납입 시기
재정부담	전액 국고 지원 〈예산: 지원한 바 없음〉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예산: 국고 30%지원〉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예산: 국고 25%지원〉
국민연금기금부담	해당없음	70%	25%
본인부담	개인부담 없음		25%
조건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08년 이후에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인정기간	6개월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최장 1년
인정소득	노령연금 취득시점의 A[1]값의 1/2	노령연금 취득시점의 A값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주: 1)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사업장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02 국민연금 크레딧 예산편성 현황

2017년도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총 546억 1,600만원

- 출산크레딧은 일반회계에서 1억 1,600만원을 계상
- 실업크레딧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에서 각각 18억 8,500만원, 175억 8,500만원, 188억 3,000만원 계상
- 실업크레딧은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대상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시기에 국고지원이 발생하므로 현재는 계상된 예산이 없음.

[표 2] 2017년도 국민연금 크레딧 관련 예산안 및 계획안 현황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출산크레딧	일반회계	33	45	116	71	158
군복무크레딧		–	–	–	–	–
실업 크레딧	일반회계	12,870	22,108	18,085	−4,023	−18.2
	고용보험기금	12,370	21,608	17,585	−4,023	−18.6
	국민연금기금	12,370	22,846	18,830	−4,016	−17.6
계		37,643	66,607	54,616	−11,991	

자료: 보건복지부

03 국민연금 크레딧 예산의 문제점

출산크레딧의 국고부담률 및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국민연금법」 제19조는 출산크레딧과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실제 예산은 매년 추계한 수급자 수에 30% 국고부담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편성
-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출산크레딧 관련 수급자 수 추계 오차는 지속적으로 증가
  - 출산크레딧 관련 수급자 및 국고지원액 추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안에 따른 수급자 추계치 보다 실제 수급자 수가 많았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액 역시 실제 소요액보다 적게 지원된 것으로 파악됨.

[표 3] 출산크레딧 관련 수급자 및 국고지원액 추계 현황 (명,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안 수급자 추계치(A)	32	47	74	157	256	430	960
실제 수급자(B)	42	103	139	287	412	557 ('16.8월)	–
오차(B–A)	10	56	65	130	156	–	–
국고지원액	3,000	4,000	8,000	19,000	33,000	45,000	–
실제소요액	4,115	8,954	15,087	23,152	41,351	41,464 ('16.8월)	–

자료: 보건복지부

- 수급자 수를 과소 추계하는 경우 국가의 부담은 당초 국고부담률인 30%보다 줄어들고, 반대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부담은 7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됨.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의 사례와 같이,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정 상황에 따라 출산크레딧 관련 국가의 지원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국민연금기금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
  -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와 이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의 초과 부담의 문제는 군복무크레딧 및 실업크레딧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

출산크레딧에 대한 낮은 국고부담률로 인한 연금 가입자 부담 증가

- 크레딧 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국민연금제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군복무크레딧은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훈의 의미에서, 출산크레딧의 경우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한 실직자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의 일종으로 종합적 노동정책의 일부로 도입된 것임.
- 그러나 현행법은 크레딧마다 국고부담률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
  - 군복무크레딧은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반면, 출산크레딧의 경우 명시적으로 국고부담률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도록 규정
  - 예산 편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부담비율은 출산크레딧의 경우 70%, 실업크레딧의 경우 25%임.

- 특히, 출산크레딧의 경우 국고부담률 30%보다 훨씬 높은 70%를 국민연금기금의 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출산크레딧 대상자들이 본격적인 노령연금수급자가 되는 시기 연금재정의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
  - 현재까지는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가 많지 않아 국민연금기금의 재정부담이 크지 않았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출산크레딧 급여의 수급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서고 국민연금기금의 부담액은 2,388억원에 이르며, 2050년에는 수급자가 200만명을 넘고 기금의 부담액은 1조 1,6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됨.

사후 국고지원방식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 발생

-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적용 대상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획득하는 시기에 국고지원이 이루어짐.
  - 실업크레딧의 경우 보험료 납입 시기에 적용 대상자의 자부담 25%와 함께 국고,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에서 25%씩 적립
- 출산 또는 군복무로 크레딧 적용을 받는 20~30대가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크레딧 급여지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60년 출산크레딧 급여 대상자는 약 340만명으로 일반회계 8,952억원, 국민연금기금 2조887억원 부담
  - 2060년 군복무크레딧 급여 대상자는 약 164만명으로 일반회계 8,090억원 부담
- 이로 인하여, 혜택은 현 세대가 누리고 비용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 발생
  - 2015년 9월~11월까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에서도 크레딧 제도의 사전적립방식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장의 재정부담으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

[표 4] 2031~2060년 출산 · 군복무 크레딧 제도로 인한 소요액 장기재정추계 (억원, 명, 2015년 불변가)

연도	총 급여 지출액	출산크레딧 급여				군복무크레딧 급여		
		계 (100%)	인원	일반회계 (30%)	연금기금 (70%)	계	인원	일반 회계
2031년	617,035	3	838	1	2	0	0	0
2032년	667,465	14	3,679	4	10	0	0	0
2033년	697,458	43	8,970	13	30	0	0	0
2034년	730,529	109	24,293	33	76	0	0	0
2035년	787,361	236	51,908	71	165	0	0	0
2036년	847,474	436	87,162	131	305	0	0	0
2037년	909,541	778	150,268	233	545	0	0	0
2038년	975,490	1,330	220,180	399	931	0	0	0
2039년	1,032,852	2,237	378,743	671	1,566	0	0	0
2040년	1,097,687	3,411	539,823	1,023	2,388	0	0	0
2041년	1,162,941	4,647	712,419	1,394	3,253	0	0	0
2042년	1,228,136	5,918	876,922	1,775	4,143	0	0	0
2043년	1,294,228	7,188	1,041,000	2,156	5,032	0	0	0
2044년	1,360,039	8,486	1,206,503	2,546	5,940	0	0	0
2045년	1,428,073	9,810	1,370,432	2,943	6,867	0	0	0
2046년	1,497,773	11,136	1,529,998	3,341	7,795	0	0	0
2047년	1,564,956	12,467	1,689,033	3,740	8,727	20	11,985	20
2048년	1,629,305	13,824	1,848,315	4,147	9,677	80	34,853	80
2049년	1,689,727	15,219	2,008,841	4,566	10,653	177	65,304	177
2050년	1,746,588	16,640	2,166,178	4,992	11,648	305	102,052	305
2051년	1,800,887	18,063	2,319,054	5,419	12,644	461	143,571	461
2052년	1,853,106	19,482	2,467,780	5,845	13,637	944	304,473	944
2053년	1,904,376	20,899	2,611,796	6,270	14,629	1,748	464,919	1,748
2054년	1,955,983	22,296	2,749,389	6,689	15,607	2,571	627,057	2,571
2055년	2,007,472	23,654	2,878,982	7,096	16,558	3,421	791,700	3,421
2056년	2,058,515	24,963	3,000,119	7,489	17,474	4,302	959,054	4,302
2057년	2,111,174	26,232	3,114,663	7,870	18,362	5,217	1,129,896	5,217
2058년	2,166,099	27,479	3,223,945	8,244	19,235	6,166	1,303,012	6,166
2059년	2,221,925	28,688	3,324,385	8,606	20,082	7,131	1,472,850	7,131
2060년	2,276,837	29,839	3,415,258	8,952	20,887	8,090	1,637,811	8,090

자료: 보건복지부

04

국민연금 크레딧 예산의 개선방안

국고부담률 명시 및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출산크레딧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고부담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추계상 오차에 따른 국고부담비율 미준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정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 보완 필요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고부담비율 상향조정 검토 필요

- 출산크레딧에 대한 높은 기금부담률은 향후 연금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책임준비금 적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고지원비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독일, 스웨덴, 영국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크레딧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5] 해외 주요국가의 출산(양육)크레딧 제도 운영 현황

국가	인정기간	추가인정 시점	재원분담
독일	아동부양기간 – 1992.1.1. 이전 출생자녀 1인당 1년 – 1992.1.1. 이후 출생자녀 1인당 3년	양육활동을 한 시점	국고 100%
프랑스	16세 미만 아동 1명당 2년(저소득층 3년), 3명 이상인 경우 최종연금의 10% 증액	연금수급권 발생 시점	일부 연금기금 일부 기타재원
스웨덴	4세 미만 아동부양	양육활동을 한 시점	국고 100%
영국	산모 및 아동수당 수급기간(16세 아동)	양육활동을 한 시점	국고 100%

자료: 유호선 · 이지은, 「크레딧 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11.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 방안 강구

- 사전적립방식이란 크레딧 요건에 해당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현행 국고부담비율 유지를 전제로 하여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2015년 불변가격 기준 출산크레딧 6,060억원, 국복무크레딧 1,665억원 추가 필요
  - 당장의 재정부담 역시 적지 않으나, 현 세대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도입이 어려운 문제는 미래세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저성장 ·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Ⅴ. 농업인의 소득안정 정책과 입법동향

농산물시장 개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업인을 위한 각종 소득 안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농업을 통한 소득은 정체된 상태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금 제도, 수급관리 제도 및 수입안정 제도 등을 실시

- (직접지불금 제도)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 분을 보전하는 직불금의 2017년 예산안은 3조 427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약 21.08%를 차지
- (수급관리 제도) 공공비축사업으로 연간 약 36만톤을 매입하고, 초과공급과 가격하락에 따라 추가 매입을 실시
- (수입안정 제도)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가격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중점적으로 추진

제20대 국회에서는 농업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불금 · 공공비축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

- (직접지불금 제도) 농작물의 가격하락 발생 시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직불금 제도 보완을 통한 농가 소득 지지
  - (쌀 소득보전직불금)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의 분리 운영, 변동직불금의 보전비율을 85% → 90%로 상향
  - (FTA피해보전직불금) 피해보전비율을 90% → 95% 로 상향, 지급기간 2021년 → 2025년 연장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회수 제한 폐지, 품목별 차등지급제도 도입
  -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작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
- (수급관리 제도) 공공비축을 통한 가격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부 매입량의 법제화
- (수입안정 제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어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입률 제고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WTO 농업협정에 따른 감축대상보조(AMS)와 국가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

- 직접지불금 제도 등의 보완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WTO농업협정에 따른 감축대상 보조(AMS) 1조 4,900억원의 제약을 고려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공하는 법안비용추계서를 활용하여 법 개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 정혜윤 예산분석관(788-3746)

01 배경

본고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제20대 국회의 관련 입법 동향과 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한국 농업은 식량안보와 국토 균형발전, 도시와의 소득격차 등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공감대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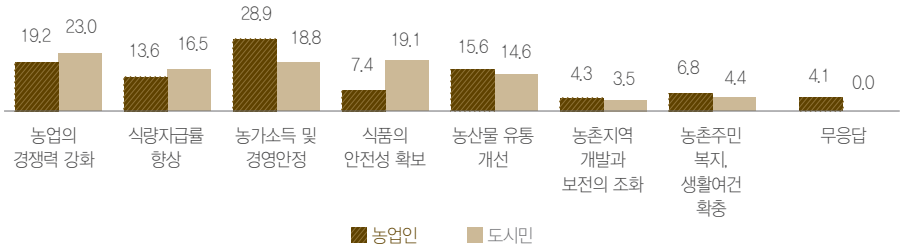
- 농업 ·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7.2%,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0.7%를 차지[1)]
  -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에 대해 도시민의 59.5%가 '찬성' 응답(지난해 대비 8.6%p 증가)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 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5.12.

농업분야 예산 배분에 있어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 개선'의 순으로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인식

- 이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농업 · 농촌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 농업인 직업만족도(56점)는 국민 평균보다 낮으며(68.2점), 원인으로 소득보장 미흡(49%)과 장래불안(31.5%) 순으로 응답
-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인식
  -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보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높은 관심

[그림 1] 농업예산 배분 우선순위 인식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 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5.12.

정부는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등 각종 소득보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격차는 2005년 1.28배에서 2012년 1.74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2015년에는 1.55배로 나타남.

02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현황

가. 직접지불금 제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하락분을 직접 보전하는 다양한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제도를 도입 · 시행

- 쌀 수입보전 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밭농업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FTA폐업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실시
- 그러나 직불금 제도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음으로써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 현재 실시중인 쌀 변동직불금 및 FTA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감축대상 보조(AMS)[2]에 해당하며 한국의 감축대상보조 연간 지급한도는 1조 4,900억원

2 '보조총액측정치'라고도 하며,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의 약어로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 왜곡 보조금의 총계를 의미

[표 1] 직접지불제 운용 및 예산규모 현황 (백만 원)

직접지불제	예산 규모				WTO 협정상 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안)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제)	774,000	845,000	824,000	816,000	허용보조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변동직불제)	20,030	164,146	719,291	977,747	감축대상보조
밭농업직접지불제	134,731	192,931	211,829	190,646	허용보조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100,478	100,478	100,478	100,478	감축대상보조
FTA폐업지원	102,717	102,717	102,717	102,717	허용보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4,192	50,806	43,650	41,096	허용보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39,511	39,511	39,511	47,220	허용보조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4,072	13,870	13,591	11,592	허용보조
경영이양직접지불제	61,737	58,998	57,339	54,517	허용보조
순직불제 예산 합계 (a)	1,291,468	1,568,457	2,112,406	2,342,133	
기타 직불제 예산 (b)	274,396	289,635	288,203	287,695	
직불성 복지예산 (c)	400,685	423,370	416,582	412,985	
농업분야 직불예산 계 (D=a+b+c)	1,967,444	2,281,462	2,817,191	3,042,693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E)	13,637,100	14,043,100	14,368,100	14,422,000	
농업분야 직불예산 비율 (D/E)	14.43%	16.25%	19.61%	21.08%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직불예산은 순 직접지불제 예산(a)과 재해보험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기타 직불제 예산(b),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의(연금보험료 등 지원) 직불성 복지예산(c)으로 구분됨. 본고에서는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서술함에 따라 순 직접지불제도는 '가. 직접지불금 제도', 재해보험제도는 '다. 수입안정 제도'로 구분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불금 예산 합계는 3조 427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약 21.08%를 차지

- 이 중 순 직불제 예산은 2조 3,421억원으로 2016년의 약 2조 1,124억원 대비 약 2,297억원 증액 편성
- 쌀 변동직불제의 경우 2016년산 쌀 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35% 증액 편성 (2016년 8,240억원 → 2017년 9,777억원)[3]

3 2016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2017년 변동직불금 지급예산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증액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예산안 분석보고서」, 2016.10.)

정부는 농업소득 안정을 위한 쌀 고정직불금의 단가를 ha(헥타르)당 100만원까지 인상

- 쌀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2012년 70만원/ha → 2013년 80만원/ha → 2014년 90만원/ha → 2015년 100만원/ha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나. 수급관리 제도: 공공비축제

농산물은 기상의 영향으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우며 이에 따른 가격 등락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비축 등을 통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를 매입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상시 확보하는 제도

- 기존의 추곡수매제는 WTO 체제에서 제한을 받음에 따라, 2005년부터 시장친화적인 공공비축 제도로 전환, 안정적인 양곡 물량 확보에 중점
  - UN식량농업기구(FAO) 권장량기준인 쌀 소비량의 17~18% 수준(2개월분) 유지를 목표로 비축
  - 제도 개편에 따라 감소한 소득보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 공공비축 이외에 쌀 초과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격리[4]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매입
  - 정부는 2016년 쌀 생산량 가운데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25만톤으로 예상, 연내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을 발표[5]

4 쌀의 수확기의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매입하는 제도

5 농림축산식품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2016.10.06.

[표 2] 연도별 정부 매입·비축 양곡 현황 (천 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곡 생산량 (A)	4,843	4,916	4,295	4,224	4,006	4,230	4,241	4,327
정부 매입량 (B)	500	936	426	261	363	368	610	703
– 공공비축	400	370	340	261	363	368	370	360
– 시장격리	100	566	86	–	–	–	240	343
생산량 대비 정부 매입 비율 (B/A)	10.32%	19.04%	9.92%	6.18%	9.06%	8.70%	14.38%	16.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공비축은 정부의 양곡 판매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2017년 예산안으로 세출 1조 4,144억원 편성

- 공공비축미는 군 · 관수용 등으로 일정량을 연중 판매하며, 시장에는 공매를 통해 시가로 방출하는 것이 원칙
  - 만약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는 경우 차액은 WTO 농업협정에 따른 감축대상 보조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수입안정 제도: 농업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변동위험에 대응하고 지원금의 무상 지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보험제도를 도입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가뭄 ·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현재 농업의 주요 안정장치로 작용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 시설물에 손해를 입은 계약농가에게 평균 생산액의 일정수준을 보장하여 소득의 안전망을 구축
  - 국고에서 보험료의 50~60%, 운영비의 100%,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험료의 20~30% 보조하여 실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30% 미만
  - 2001년도 도입당시 농작물 2개 품목, 가축 3개 축종으로 시작하여 2016년 현재 농작물 50개 품목, 가축 16개 축종까지 확대
  - 사업예산은 2001년 166억원에서 2017년(예산안) 2,820억원으로 약 17배 증가, 보험가입금액은 2001년 5천억원에서 2015년 9조원으로 확대

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더불어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장하는 정책보험

-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
  - 과거 5년간 평균 수확량과 평균 가격을 곱한 기준 수입의 60~85%를 보장
  - 2015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현재 4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 중으로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 예정

[표 3] 수입안정제도의 예산 현황 (백만 원)

수입안정제	예산 규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안)
농작물 · 가축 재해보험	270,110	281,208	282,036	282,293
수입보장보험	–	4,141	4,649	4,649
합계	270,110	285,349	286,685	286,942

주: 위의 수입안정제도 예산은 [표 1]의 기타 직불제 예산(b)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서술함에 따라 재해보험제도는 '다. 수입안정 제도'로 구분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03 농업인 소득안정에 관한 최근 입법 동향

정부의 각종 소득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변동성 심화,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수지 악화로 인하여 소득안정 정책의 보완 필요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4개월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116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농업인의 소득 안정 관련 법안은 27건

가. 직접지불금

1.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6)]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분리 운영

- 현행법상 쌀 목표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차감하지 않은 전액에 대하여 변동직불금을 지급
- 개정안에 따라 연평균 약 6,797억원, 5년간 약 3조 3,987억원의 추가재정 예상

보전비율의 상향조정

- 현행법상 쌀 목표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90%로 상향조정
- 개정안에 따라 연평균 약 668억원, 5년간 약 3,399억원의 추가재정 예상

2.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피해보전비율을 95%로 상향 조정하고, 2021년에 종료되는 직불금 제도의 지급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7)]

- 2012년까지는 발동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2013년 2개(254억원), 2014년 4개(323억원), 2015년 11개(471억원)으로 피해품목이 다양해지고 직불금이 증가하는 추세
- 개정안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간 약 28억원, 2022년부터 2025년 까지는 연간 약 568억원 추가 재정소요 예상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예정)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00045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000476호)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생산품목별 차등 지급액을 도입[8)]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직불금으로 친환경 생산 초기단계에 지급
  - 토지 용도별(논/밭), 친환경농업 단계별(유기/무농약) 단가 지급
  - 유기농산물 5회, 무농약농산물 3회 등 친환경농업 단계별 횟수 제한
- 개정안에서는 직불금의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친환경농업의 유지를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생산비를 반영한 품목별 차등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
-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830억원, 5년간 약 4,150억원 추가 소요 예상
  - 회수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연간 약 769억원, 품목별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연간 약 61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001026호)

4.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작물의 생산비 상승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9)]

-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작물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6개 지자체 추가 제정 예정)
- 쌀 및 밭 농업직불제 대상품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축산물 일부 품목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산물소득조사의 작목별 소득현황을 참고할 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의 조사대상 중 생산비가 수입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품목은 없었음.
  - 다만 한우, 육우, 계란 등 축산물 분야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5년 간 약 3,383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계(연평균 약 677억원)

9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1915342호)이 제19대에서 발의되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 예정으로 재정규모를 검토함.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예정)

나. 수급관리 및 수입안정 제도

1. 쌀 공공비축제

정부의 양곡 매입량을 총 생산량 기준 50% 이상으로 확대[10)]

- 쌀 생산량 증가 ·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재고증가 · 가격 하락에 따라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 요구
  - 농림부는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쌀 초과공급량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시장격리 실시 예정
- 개정안에 따라 현행 대비 공공비축미 60만 톤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11)] 연간 추가 지출예산은 평균 약 1조 3천억원(양곡매입비 약 1조 2,386억원, 보관비용 671억원)으로 예상[12)]

11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공공비축 및 농협의 매입량이 연간생산량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임에 따라 공공비축미 60만톤의 추가 매수를 가정

12 공공비축미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판매(방출)량이 결정되어 판매량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단, 판매량이 매입량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가정할 때 연평균 약 2천억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되어, 순 지출은 연 평균 1조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농업재해보험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어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입률 제고를 위한 법안이 발의

-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위험보장방식 보험[13]에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의 전환 요구[14]
  - 종합위험보장방식의 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험료 지원액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무사고환급제'[15]등 도입
  - 특약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의 50%는 국고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

13 현재 과수5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은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01983호)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00330호)

04 시사점

직접지불제 보완 등 법 개정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쌀 소득보전직불금) 쌀 변동직불금의 확대, 보전비율 상향조정 등은 쌀 산지가격 하락에 대비한 논벼농가의 소득안정 기대
  - WTO 농업협정에 따른 감축대상보조(AMS) 제약을 고려할 필요
- (FTA피해보전직불금) 피해보전비율 상향 조정 및 시행기간 연장은 FTA체결 이후 심화되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5년 품목별 호당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고구마 24,700원, 밤 1,300원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소득 안정 기여도가 낮아,[16] 직불금 산출에 사용되는 조정계수(수입기여도)의 적정성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회수 제한을 폐지하고 품목별 차등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보전과 함께, 품목별로 상이한 생산비와 연계된 직불금의 도입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재 친환경 농업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여 사업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려는 노력 필요
-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제도 도입 시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생산비의 증가에 따른 농업인의 손실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연간 약 67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수급관리 제도)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부 매입량을 법제화하는 경우 쌀 수확기의 일시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쌀 생산량 증가 및 소비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개선 필요

16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예산안 분석보고서」, 2016.10.

법안 검토 과정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보조는 WTO 규정에 따른 감축대상보조(AMS) 등의 제약을 고려할 필요

- 현재 한국의 감축대상보조 연간 지급한도는 1조 4,900억원으로,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필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직접지불금 관련 개정안은 향후 지속적인 정부지출을 발생시키는 의무지출에 해당하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공하는 법안비용추계서의 추가 재정소요 추계치를 활용

nabo
경제동향 & 이슈
Economic Trends & Issue

발행인 김준기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편 집 경제정책분석과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nabo
경제동향&이슈
www.nabo.go.kr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6-001366-07